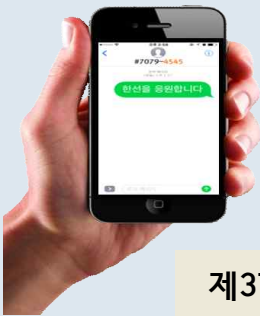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한미정상회담 성과 및 과제
[발제자]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교수
[일 시] 2021년 6월 17일(목) 오전 9시 30분
[장 소] YouTube 한선TV 채널



☒ 문자 후원
#7079-4545

제373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요 약

-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 공유를 재확인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대중 정책 기조 하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반중 전선에 한국이 동참한 것이다.
- 미·중간 경쟁은 지구적 리더십 확보가 핵심이다. 정당성에 바탕 한 문제 해결 능력이 지구적 리더십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민주주의 표본으로써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성공적

으로 복원한다면 경쟁에서 우위 확보가 가능하다. 반면 중국은 구조적 한계가 상존한다. 근본적으로 자유가 부재한 권위주의 체제는 세계차원에서 동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기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과 국익의 균형추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추구해야 한다.

◆ 한미정상회담 성과

- ◆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전략적 모호성, 초월적 외교를 표명하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가치·규범·제도를 공유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포기하고 대중 정책을 완전히 미국과 동일하게 바꾼 것은 아니나 어느 정도 미국의 대중 정책에 동참했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를 사실상의 반중전선에 동참 시킨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교하고 섬세한 접근과 문재인 정부의 북한 우선주의가 결합한 결과이다.

가. 기술 협력

- ◆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실질적인 성과는 기술협력분야이다. 5G 및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포함한 첨단 정보통신 분야에 한국이 10억 불을 투자하기로 했다. 핵심·신흥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파트너십 강화는 한국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이에 따라 한국이 기술표준 구축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는 큰 의미를 가진다. 기술 분야의 선발주자가 되면 기술 표준 사항에 개발된 기술을 맞춰야 하는 필요성이 사라지므로 한국의 산업 경쟁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 한국 4대 기업이 미국의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에 44조를 투자하면서 미국의 품목 공급망 조정에 사실상 동참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한국 ‘기업’의 투자이기 때문에 다음 대선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상관없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 반도체의 공급망 재편은 중국을 당장 배제할 수 없어서 장기전이 될 수 있으나 방향성을 함께 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나. 북핵 문제

- ◆ 북한 문제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수용하려고 노력했다. 문재인 정부 입장뿐 아니라 북한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면서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 했다.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로, 유엔 ‘제재’결의가 아닌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로 표현을 바꾼 것도 그런 이유이다. 미국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언급하면서도 승계하는 입장인지 인정하는 입장인지 확실히 하지 않은 애매한 자세를 취했다. 공동성명서에는 대부분 상징적인 수사적

표현이었을 뿐 구체적인 양보는 없었다. 북한이 원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에 대한 것 역시 구체적 언급 없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혔다.

- ◆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에 대한 미사일 지침이 폐지되었다. 기존 800km 사거리로도 한반도 방어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한반도를 넘어 그 능력을 확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것은 미국의 독단적인 방어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는 전략 측면을 고려해서 동맹국의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켜 미국의 미사일 능력과 연동하려는 것이다.

◆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

- ◆ 미국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재건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 그간 미국이 주도했던 자유주의적인 국제질서가 많이 훼손되었다. 특히 중국은 영토 모험주의와 강압으로 기존 질서에 도전하고 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협력하여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자유는 거부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이 전략은 많은 나라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 ◆ 미국은 동맹 체제 복원을 통한 역내 “세력균형”을 넘어서 우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역내 국가의 “비대칭적 능력”을 강화하여 군사·정보 협력체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미국이 동맹국과 우호국의 지정학·지경학적 특징과 이점을 살리면 전력 승수(부대 이점을 최대한 살리면 전투능력을 확장할 수 있다는 군사용어) 효과로 미국이 우위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 ◆ 바이든 정부는 의제별 맞춤형 협의체를 구성하려 하고 있다. 현재 유엔이나 나토와 같은 거대 체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왔기 때문에 자유주의 연대의 다면적 재건축을 꾀하는 것이다. 모든 의제를 망라하는 거대 협력체를 구성하기보다는 의제별 비스포크(맞춤형) 협의체를 설립하여 유연하고 혁신적인 동반자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자유주의 연대의 기존 체제를 현대화하고 강화하여 작동 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이다.

◆ 한미정상회담 과제

- ◆ 대중 견제가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이다.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서에는 대중 정책에 대한 한미 간의 차이점이 명시됐지만 사실상 가장 전향적인 중국 견제 내용을 담고 있다.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남중국해 자유항행 및 통행,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안정을 명시했고 중국의 인권문제까지도 포함했다. 게다가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WHO 투명성 및 중립성을 증진하고

코로나19 발병의 기원 조사를 지원하겠다는 사항까지 언급했다.

- ◆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정체성, 세력균형, 비스포크(맞춤형) 접근에서 미국의 접근 방식을 수용했다. 지구적 리더십을 확보하기까지 미·중은 장기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다. 미중 양국이 처한 대내외적 상황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정당성 확보의 관건이 될 것이다. 미국은 내부적으로 민주주의의 기능 이상과 경제 양극화의 문제, 중국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미국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 세계 지도국의 역할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중국은 자유무역과 포용적인 다자주의를 표명하고 있으나 홍콩과 대만을 위협하는 모습에서 권위주의 체제가 여전함을 보여주었다. 중국의 이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는 모습으로는 다른 국가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을 수 없다. 때문에 중국의 지구적 리더십 확보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 ◆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도 시효가 소멸되고 있다. 미중이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과 국익 추구의 균형추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북 정책 공조에 대한 부분도 한국의 대북 유화정책과 미국의 제재 유지라는 한미 간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